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림쥐 모의평가 정답 및 해설

• 사회탐구 영역 •

정치와 법 정답

| | | | | | | | | | |
|----|---|----|---|----|---|----|---|----|---|
| 1 | ① | 2 | ① | 3 | ⑤ | 4 | ② | 5 | ③ |
| 6 | ④ | 7 | ⑤ | 8 | ② | 9 | ③ | 10 | ③ |
| 11 | ④ | 12 | ③ | 13 | ④ | 14 | ⑤ | 15 | ② |
| 16 | ③ | 17 | ② | 18 | ④ | 19 | ⑤ | 20 | ③ |

해설

1. [출제요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가 국가와 사회 집단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A는 넓은 의미의 정치이고, 국가 권력이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활동만을 정치로 보는 B는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가)에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정치로 바라보는 활동이 들어가야 한다.

[해설] ①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는 모두 '국회의 예산안 의결'을 정치로 본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② 넓은 의미의 정치가 좁은 의미의 정치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③ 넓은 의미의 정치와 달리 좁은 의미의 정치가 받는 비판이다. ④ 넓은 의미의 정치가 좁은 의미의 정치에 비해 사회적 최소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달리 총학생회 회의에서 학식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2. [출제요소] 법치주의의 유형

정부의 권력 행사가 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만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해설] ㄱ.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한다. 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법률을 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약용되기도 한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법률 제정 과정에서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3. [출제요소] 정치 참여 집단

백서 기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구성된 A는 이익 집단이다.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B는 정당이다.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C는 시민 단체이다.

[해설] 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당이 아닌 국회이다. ②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③ 모든 정치 참여 집단은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④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 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공적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출제요소] 헌법의 기본 원리

고용 관련 문제를 실현하는 것이 A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하였으므로,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해설] ① 국제 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②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③ 평화 통일 지향에 대한 설명이다. ④ 문화 국가의 원리에 관한 서술이다. ⑤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5. [출제요소] 국가 기관 파악

탄핵 소추를 의결한 A는 국회, 국가 원수인 B는 대통령이다. 탄핵 심판 결정을 하는 C는 헌법 재판소이다.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D는 국무 회의, 국무 회의의 부의장인 E는 국무총리이다.

[해설] ① 국회는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② 대통령은 국가 원수가 아닌 행정부 수반의 권한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주요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3 수능특강) ④ 헌법 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헌법 재판소의 장(長)뿐이다. ⑤ 국회의원과 달리 국무총리는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6. [출제요소] 정치 과정

정치 주체가 요구 지지하는 것을 뜻하는 A는 투입이다.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의미하는 B는 산출이다. 산출 결과에 대한 재투입인 C는 환류이다.

[해설] ㄱ.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닌 정치 주체로, 정당이 선거에 공약을 내는 것은 산출이 아닌 투입에 해당한다. ㄴ. 시행된 정책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하는 것은 환류이자 투입에 해당한다. ㄷ. 갑국은 을국에 비해 투입은 적고 환류는 적으며, 산출만 많으므로, 정책 결정 기구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ㄹ. 투입과 산출, 환류가 모두 많은 을국은 갑국에 비해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할 가능성이 작다.

7. [출제요소]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 심판을 관할하는 A는 헌법 재판소이며,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해설] ① 헌법 재판소는 정부가 제소한 정당 해산 심판을 관할한다. ② 법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소원의 제청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③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국회의 입법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국회의 권력 행사를 전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④ 헌법 재판소가 그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5인 이상의 위헌 의견이 아닌 6인 이상의 위헌 의견으로 가능하다.

8. [출제요소] 지방 자치

제시문에서는 □□시의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고 있었다.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경우는 □□시가 기초 자치 단체인 경우이므로, □□시는 기초 자치 단체, △△구는 □□시 소속 일반 구이다.

[해설] ㄱ.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에 대한 선거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ㄴ. 임명직인 △△구청장은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통해 지자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 ㄹ. 지자체장과 달리 지방 의회는 조례안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

9. [출제요소] 기본권

같은 1개 질문에 대해서만 옳게 답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가)에 들어갈 질문에 대해서만 옳게 답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C는 참정권으로 확정되며, A에 대한 옳은 답은 아니요, B에 대한 옳은 답은 아니요로 확정된다. 따라서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으로 확정된다.

[해설] 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같은 옳지 않게 답하였으므로, ①은 '아니요'이다. ②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같은 옳지 않게 답하였으므로, ②은 '2개'이다. ③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기본권을 구체화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모든 기본권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⑤ 사회권과 참정권은 모두 국가의 존제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다만, (가)에 대한 옳은 응답이 '아니요'이므로, (가)에 해당 질문은 들어갈 수 없다.

10. [출제요소] 정부 형태

t시기 갑국의 제1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의 의석률은 20%이므로, t시기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확정된다. 이후 각 시기의 정부 형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t시기와 t+1시기의 정부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첫 번째 정부 형태 변경은 t+1시기에 나타났다. 이 경우 t+1시기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가 된다.

① t+2시기에 두 번째로 정부 형태가 변화되는 경우 t시기와 t+2시기, t+3시기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여소야대가 발생하므로 모순이다.

② t+3시기에 두 번째로 정부 형태가 변화되는 경우 t시기와 t+3시기 두 시기간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여소야대가 발생하므로 조건에 부합한다.

위의 경우의 수를 정리하면 t시기와 t+3시기에 갑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t+1시기와 t+2시기에 갑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설] ㄱ.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t+3시기에 갑국의 의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ㄷ. 단독 내각이 구성되는 t+1시기는 연립 내각이 구성되는 t+2시기에 비해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ㄹ.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t+3시기와 달리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t+2시기에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출제요소] 민법의 기본 원칙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을 통해 법원의 판결 근거가 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임을 알 수 있다.

[해설]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⑤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12. [출제요소] 가족 관계와 법

갑과 을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이다.

[해설] ㄱ.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친모는 인지 절차가 필요 없으며, 친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2023 수능특강) 따라서 인지 절차가 없더라도 A와 A의 친모 을 사이의 친족 관계는 A가 태어난 시점에서 형성된다. ㄴ. 갑과 을이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을은 갑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음을 이유로 갑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ㄷ. 면접 교섭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등과 그 자녀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입양 당시 이미 성년이 된 A에 대해서는 이미 면접 교섭권이 소멸된 상태이다. ㄹ.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친생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고, 입양 시점에서 친권도 함께 양부모가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을과 병이 C를 친양자로 입양함으로써 C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C를 대리할 수 있는 친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13. [출제요소] 미성년자의 계약

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 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므로, 갑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갑은 병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중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계약 모두에서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① 해당 계약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을은 확답 청구권을 가진다. 단 확답 청구권은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만 행사 가능하나, ②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고가의 전자 기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을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전자 기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것이지 무효는 아니다. ④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모두 존재하는 해당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다. ⑤ 병이 계약 당시 갑의 나이를 몰랐다면, 해당 계약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므로 병이 갑 또는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 [출제요소] 범죄 성립 요건

갑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을의 행위는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교사는 을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가 맞다고 하였으므로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책임임을 알 수 있다. 갑의 행위는 C가 조각된다고 하였으므로, C는 위법성임을 알 수 있다.

[해설] ①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죄사실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위법성이다. 책임은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③ 심신 미약자의 이유 없는 폭력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고,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심신 미약자의 행위는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④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⑤ 현행범을 체포하는 일반 시민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출제요소] 근로자의 권리 보호

[해설] ㄱ. 쟁의 행위는 근로자(파업, 태업 등)와 사용자(직장주 등)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2023 수능특강 날개) ㄴ. 적법한 쟁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이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ㄷ. 중앙 노동 위원회는 지방 노동 위원회와 달리 A 회사의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를 부당 노동 행위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중앙 노동 위원회에 제심을 신청한 주체는 갑 측(갑 또는 A 회사 노동조합)이다. ㄹ. A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에 대해 중앙 노동 위원회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A 회사가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경우 원고는 A 회사이며, 피고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다.

16. [출제요소] 특수 불법 행위

[해설] ㄱ. 갑이 반려건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라 하더라도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정치와 법 교육과정 내에서 무과실 책임은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 환경 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된 책임을 말한다. ㄴ. 갑과 을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동일한 만큼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서로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ㄷ. 병에게 책임 능력이 없더라도, 병의 법정 대리인이 병에 대한 법적 감독 의무자로서의 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이 증명된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ㄹ. 병에게 책임 능력이 있더라도 갑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이유로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병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17. [출제요소]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해설] 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은 체포 영장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이다. 체포되는 별개로 체포된 갑에 대한 구속은 영장주의에 따라 사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② 갑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주체는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의 주체(검사 등)이며,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이다. ③ 국민 참여 재판에서 판사의 판결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④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은 명예형 중 자격상실이다. 자격상실은 사형,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동시에 부과하는 형벌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을 '정지'하는 자격 정지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유기 징역과 자격 상실은 동시에 부과될 수 없다. ⑤ 집행유예는 집행 유예가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면소된 것으로 간주(공소제기가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 유예와 구분된다.

18. [출제요소]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정보 기술이 국가의 배타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권력 자원 중 하나이며, 국제 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유발하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보는 A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능하게 된 소통의 향상은 국제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상호 의존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는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해설] ① 현실주의적 관점과 구분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자유주의적 관점과 구분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③ 현실주의적 관점과 구분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현실주의적 관점과 구분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자유주의적 관점과 구분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19. [출제요소] 국제법의 법원(法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A는 조약이다. 국제 사회에서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야 하는 B는 국제관습법이다.

[해설] ①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비준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며, 이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 ②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예시이다. ③ 모든 국제법의 법원은 우리나라에서 헌법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④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⑤ 조약은 3개 이상의 주체(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다자 조약 체결을 통해, 국제관습법은 그 자체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져 3개 이상의 국가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20. [출제요소] 선거 결과 자료 분석

1) 현행 현행에서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고 하였다. 각 선거구에서 확정적으로 선출되는 경우는 O표시를, 2인을 공천하여 한 정당에서 2인이 당선될 수 있는 경우(한 정당의 획득 표의 절반이 해당 선거구 2순위 득표보다 많은 경우)에는 2인 공천 정당과 2순위 정당에 V를 표시한다. 현행 적용 시 예측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선거구 | A당 | B당 | C당 | D당 |
|-----|------|------|------|------|
| 1 | O | | O | |
| 2 | OV | V | | |
| 3 | | | V | OV |
| 4 | O | O | | |
| 5 | O | O | | |
| 의석수 | 4-5석 | 2-3석 | 1-2석 | 1-2석 |

2) 개편안 개편안에서는 선거구 3과 선거구 4를 통합한 후 각 선거구에서 득표율으로 1인만 선출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은 각각 A당, A당, D당, B당이다.

비례 대표를 배분하여보자. 비례 대표 의원 배분 산출 공식은 정당 득표율×의원 정수, 이를 다르게 나타내면 (각 정당의 획득 표/600)×6(의원 정수)이므로 6으로 약분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획득 표/100이 산출 결과가 된다. 이에 따른 산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A당 | B당 | C당 | D당 |
|----|-----|-----|-----|----|
| 결과 | 2.3 | 1.5 | 1.2 | 1 |

정수 부분을 먼저 배분하므로 정당 순서대로 2석, 1석, 1석, 1석을 획득하며, 이후 남은 1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획득하므로 B당이 획득한다. 이에 따라 확정되는 개편안에서의 의석수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A당 | B당 | C당 | D당 |
|-----|----|----|----|----|
| 지역구 | 2 | 1 | 0 | 1 |
| 비례 | 2 | 2 | 1 | 1 |
| 총의석 | 4 | 3 | 1 | 2 |

각 정당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는 석패율 제도를 통해 비례 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자료에서 제시된 석패율이 높은 순서대로 각 정당에서 당선되지 않은 지역구 후보자가 각 정당에 배분된 비례 대표 의석만큼 당선될 수 있다. 당선된 후보자를 제외한 석패율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석패율 제도로 구제되어 비례 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는 진한 글씨체로 표시하였음.)

| 선거구 | A당 | B당 | C당 | D당 |
|-----|--------------|--------------|--------------|--------------|
| 1 | 지역당선 | 35/70 | 40/70 | 10/70 |
| 2 | 지역당선 | 30/70 | 25/70 | 10/70 |
| 3-4 | 45/60 | 25/60 | 30/60 | 지역당선 |
| 5 | 45/60 | 지역당선 | 25/60 | 20/60 |

[해설] ① 현행에서 의회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는 정당은 없다. ② 개편안에서 A당은 모든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된다. ③ B당은 선거구 1과 선거구 2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가 석패율로 인해 비례 대표로 당선된다. ④ 선거구 3과 선거구 4를 통합한 개편안의 지역구에서 석패율로 인해 비례 대표로 당선된 지역구 후보자는 A당 후보자 1명이다. ⑤ 현행에서 최대 의석수를 획득하는 경우와 개편안에서 의석수가 같은 정당은 2개 존재한다. (B당, D당)

○ 정치와 법 수행생분들께 드리는 말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름포 모의고사의 저자 윤준수입니다. 이 문제지를 풀어보시는 모든 수행생분들은 해당 문제지를 올린 게시물을 꼭 한 번씩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